

반도체법 논란 확산... 지선 핵심 쟁점 급부상

수도권 제외 시행령안 전면 비판해 경기남부 반도체벨트 역차별 주장 클러스터 지정기준 변경 요구 제기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경기도지사 선거를 비롯한 도내 지방선거 구도가 반도체 정책을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는 양상이다.

수도권을 사실상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기도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들과 국회의원 일부가 반발에 나섰고, 선거판 전반에도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와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을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이날 수원 선거 캠프에서 안교재 수원특례시장·차화열 평택시장·김경희 이천시장·이충우 여주시장 후보·송석준(이천)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시행령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대상을 '수도권 밖 지역'으로 명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클러스터로 지정돼 인허가 절차 단축과 세금 공제 등 혜택을 받기 위해선 수도권 밖으로 가야한다.

이에 대해 양 후보는 "경기도 반도체 역차별 시행령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천·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 등 경기도 남부는 국가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축인데 불구하고 시행령안은 수도권을

사실상 배제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국가안보 핵심 산업인데, 정치 논리로 산업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지만 균형발전은 어느 한쪽을 억제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참석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대만·일본 등 주요 반도체 경쟁국은 이미 형성된 산업 집적지를 중심으로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다"며 "세계적 반도체 생산 거점인 경기도를 정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구체적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요건 내 수도권 배제 조항 삭제, 산업 집적지·공급망·기술 경

쟁력 중심의 지정 기준 전환, 경기도 스마트 반도체벨트 규제 특례 적용, 수도권·비수도권 병행 전략 마련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추미에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와 수도권 지역 후보들을 향해서도 "수도권 역차별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같은 당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후보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투자 위축으로 인해 반도체 클러스터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결국 산업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번 시행령을 둘러싼 논쟁은 지방선거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며 수도권 반도체 산업 정책과 기반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경기 6·3후보 평균 재산 약 27억 원

안교재 수원시장 후보 201억 최다 송창훈 용인시장 후보 -3660만 신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도에 출마하는 도지사·특례시장·국회의원 후보의 평균 재산은 약 27억 원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지사 후보 5명이 신고한 재산의 평균 금액은 약 27억 원이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후보는 조승천 개혁신당 도지사 후보로 부동산·예금·증권 등 56억 4469만 원이다.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는 40억 5988만 원, 추미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7억 9641만 원, 김현욱 국민연합 후보는 7억 850만 원을 신고했다. 5명 중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홍성규 진보당 후보로 신고액은 3억 4051만 원이다.

김 후보는 전과가 9건으로,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사기·변호사법 위반·근로기준법 위반 등이었다.

도내 특례시장 후보 13명의 평균 재산 신고액은 약 26억 원이다. 먼저 수원특례시장 선거에 나서는 국민의힘 소속 안교재 후보의 재산 신고액은 부동산·예금·증권·회원권 등을 포함한 201억 5959만 원으로 특례시장 후보 중 가장 많은 신고액을 기록했다.

이재준 민주당 후보는 19억 3405만 원, 정희운 개혁신당 후보는 2억 518만 원을 신고했다. 안 후보는 음주운전으로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기록이 있다.

용인특례시장 후보 중에는 이상일 국민의힘 후보가 52억 9933만 원으로 재산 신고액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현근택 민주당 후보가 8억 9226만 원, 송창훈 개혁신당 후보가 -3660만 원을 신고했다.

송 후보는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인한 전과 1건이 있다. 이동환 국민의힘 고양특례시장 후보는 16억 7638만 원의 신고했다. 민경선 민주당 후보는 7억 6519만 원을, 신현철 개혁신당 후보는 5억 16만 원을, 송영주 진보당 후보는 1억 6115만 원을 각각 신고했다.

민 후보와 송 후보는 각각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업무방해로 인한 전과가 1건씩 있다. 군 북부 대상자인 후보들은 병역을 이행했다.

정명근 더불어민주당 화성특례시장 후보의 재산 신고액은 15억 355만 원으로 박태경 국민의힘 후보(5억 3839만 원), 전성균 개혁신당 후보(9762만 원)보다 많았다.

후보 3명 모두 전과 기록은 없다. 한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서는 후보 11명이 신고한 재산의 평균은 약 29억 원이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후보는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재선거 후보(127억 7049만 원)다.

후보 11명 중 5명(약 45%)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훈 국민의힘 안산갑 재선거 후보와 이광재 민주당 하남갑 보궐선거 후보가 4건으로 가장 많다.

이순민 기자

현직이나 변화냐... 오산시장 선거 '3인 3색' 본게임 돌입

격전지 | 오산시

조용호, "민주 강세 명성 되찾을 것" 교육·복지 중심 민생 정책 강조

이권재, 현직 앞세워 재선 도전 교통·경제 성과 기반 안정론 부각

송진영, 제3지대 대안 정치 내세워 양당 정치 비판하며 차별화 승부



오산시의원인 송 후보는 '짧은 피임'을 강조하며 기존 거대 양당 정치에 피로감을 느낀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오산시장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표심의 분산이다. 민주당 강세 지역인 오산의 특성상, 표가 갈릴 경우 이권재 현 시장의 재산 가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중앙 정치 지형에 따른 정부 정책 방향과 지방 권력 교체 열망이 커질 경우, 조 후보를 필두로 한 단일화 압박이나 정권 심판론이 선거판을 흔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 정가에서는 결국 후보들의 '실질적 정책'이 표심을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직임을 앞세운 이 후보는 오산전 경부선철도 횡단 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충과 경제 활성화 성과를 강조한다.

도전자인 조 후보는 교육과 복지, 민생 중심의 신선한 정책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송 후보는 거대 양당이 놓친 세밀한 지역 현안과 정치 개혁안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글=지명신 기자, 사진=각 캠프 제공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 오산시장 선거 대진표가 최종 확정됐다.

이번 선거는 여당 후보 1명과 야당 후보 2명이 대결을 펼치게 됐다. 현직 시장인 이권재 국민의힘 후보에 치열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거쳐 본선에 올라 온 조용호 후보가 맞붙는 게 관전 포인트다.

여기에 개혁신당까지 후보를 내면서, '다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오산의 향후 4년을 이끌어 나갈 시장을 뽑는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접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인 3색 대결에서 우선 주목받는 후보는 혈투에 가까웠던 민주당 당내 결선 경선 끝에 공천장을 거머쥔 조용호 전 경기도의원이다.

조 후보는 '새롭고 신선한 이미지'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4년 전 보수진영에 내어준 오산시장직을 탈환하고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의 명성을 되찾겠다는 각오다. 경선에서 탈락한 민주당 예비후보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현직 시장 이권재 후보는 단순 공천으로 여유 있게 준비하고 있다. 이 후보는 재선에 나선 만큼 지난 4년간의 시장 성과와 '현직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지지층 결속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오산 시정에서 중

요한 것은 행정의 연속성과 지역 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제3지대 후보로 나선던 조국혁신당 전도현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후보자 등록 마감일에 등록을 하지 않고 조용호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오산시의원 출신인 전 예비후보는 민주개혁진영 승리와 오산 시민 통합,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국힘제로' 가치 실현을 위해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같은 날 개혁신당 송진영 후보는 전 후보와 조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 "정차합"이라며 비판했다.

사랑의예매는 기부자의 정보를 더욱 소중하게 보호하겠습니다

2025년 모금금액 984억 | 2025년 지원금액 1,072억

※ 연말에 모금액이 집중되어 일부 모금액은 다음해에 지원됨에 따라 연간 지원금액이 모금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 복권기금사업 지원금액은 제외하였습니다.